사설

DTV전환과 주파수 재배치는 일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DTV Korea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듯이 수신단(시청가구)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아날로그 수상기를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DTV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를 연결하고 안테나를 교체하는 것으로 비교적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송신단의 디지털 전환은 수신단만큼 손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송출단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 송출과 관련된 장비의 교체와 더불어 주파수의 재배치까지도 포함하는 작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상파가 사용 중인 14~68 채널 영역을 14~50 채널로 축소해서 방송 주파수를 재배치하도록 요구하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주파수 재배치 정책이 SFN(Single Frequency Network) 방식을 구현하는 미국식 정책이라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MFN(Multiple Frequency Network) 방식을 구현해서 같은 방송사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사용되는 주파수가 달라지는 형태다. 그러다 보니 방송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작업은 주파수간의 혼신을 막기 위해 곧 전국 350개에 달하는 송 · 중계소에서 지상파 채널 다섯 개에 해당하는 총 1750개의 방송주파수 배치를 모두 재검토해야하는 작업이 된다.

물론 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가장 넓은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대출력 송신소의 주파수들을 채널별로 재배치하고, 다음 단계로 그보다 작은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중출력 · 소출력 송신소들의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가능한 작업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에 일괄적으로 재배치된 주파수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송주파수를 재배치하는 작업은 곧 '각 송신소 및 중계소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아날로그 송신기를 철거하고, 그곳에 DTV 송신기를 설치하며, 채널필터를 교체하고, 안테나 신설 혹은 변경, 주파수 변경에 따른 송신기의 조정' 등 필수적인 여러 작업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단순히 '아날로그 송신기의 전원을 끄고 디지털 송신기의 전원을 켜면 해결되는 작업'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또한, 송신소의 철탑을 올라 안테나 철거 · 변경 · 설치 작업을 수행할 철탑공은 전국에 약 200명 정도로 확인되는데, 4인 1조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50개에 불과한 작업팀이 전국의 650개소의 송신소, 중계소 및 TVR의 안테나를 변경 및 신설을 2012년 12월 31일 하루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물리적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그 시점은 춥고, 어두운 한 겨울의 새벽이다. 송신소 철탑공이 수퍼맨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와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시청자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DTV 전환 일정이 늦춰질수록 아날로그 · 디지털 방송을 동시에 운영하는 비효율이 방송사에게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하루'라는 극히 짧은 시간동안 수백 곳의 송신소에서 그 다섯배에 달하는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관련되는 모든 장비를 철거 · 변경 · 설치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구상은 끔찍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비록 형식적으로 단 하루안에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배치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방송은 상당기간동안 혼신과 난시청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주파수 재배치와 디지털 전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만에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방송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 그 궁리의 결과가 만약 방통위의 애초 목표와 달리 주파수 재배치 작업 시한을 유예하거나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2기 방통위, 시작부터 좌초되나?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8일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의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승인부터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처리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1기에 이어 연임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추천)과 양문석 상임위원(민주당 추천), 새로 취임한 신용섭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실장(대통령 추천), 홍석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석좌교수(한나라당 추천), 김충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민주당 추천) 등 5명이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방통위에서 열린 제2기 방통위 출범식에서 취임사와 함께 ▲미디어 · 콘텐츠 산업 육성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성공적 완료 ▲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지속적인 인프라 고도화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추진 등 2기 방통위의 5가지 추진과제를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종편 승인과 이와 관련된 특혜 논란이다.

최 위원장은 이미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채널이 시작되면 경쟁이 심화될테니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종편에 대한 채널 특혜(채널 연번제)에 이어 광고특혜(전문 의약품 광고 허용)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양문석 위원은 "2기 방통위의 임무는 종편 특혜를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종편 채널 배정에 방통위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만약 개입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혀 2기 방통위가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광고시장을 오는 2015년까지 전체 GDP의 1% 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광고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전체 광고물량이 더이상 늘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대체적이어서 이 역시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2기 방통위 출범식에 맞춰 '최시중 위원장 연임 및 언론자유 압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 장례식을 거행했다.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디어생태계를 파탄내고 연임에 성공한 최시중 위원장, 종편 특혜가 밝혀지면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시고 언론자유 억압당사자라는 비판에 억울하다며 눈물 찔끔 흘리신 최시중 위원장을 시중드는 잡귀 중에 천하 잡귀 엠비멘토귀신은 썩 물러가라"고 일갈했다.

방통위,GPS혼신 관련 북측에 항의서한 발송

방통위는 지난 4일 수도권 서부 일원에서 발생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 정보시스템) 수신 시스템 혼신 사태와 관련해, 북측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항의서한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북측 체신상(유영섭) 앞으로 보내며, 북측에 혼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 서한을 통해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일 수도권 GPS 수신 시스템에 혼신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신사업자의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 및 인천 등 서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현상이 개성 인근에서 발생한 신호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 "동시경매 논의한 바 없다"

전자신문의 21일자 "2.1㎓ · 700㎒ 대역 '동시경매' 급부상"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 김정삼 주파수정책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자신문의) 보도를 접하고 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히며, '동시 경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0㎒ 대역의 108㎒ 폭에 대한 경매는 지상파 방송사 · 공공서비스 등과 함께 정확한 수요조사를 마쳐야만 가능하다"고 밝히며 "그 이전까지 700㎒ 경매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전자신문은 "2.1㎓ 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통신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700㎒ 대역을 추가해 동시에 경매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방통위가 조만간 동시 경매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는 공감…방식은 합의 못해"

"1개 HD채널과 3개의 SD채널이 가능한 KBS의 'KoreaView(이하 코리아뷰)'보다는 1개의 HD채널과 2개의 SD채널로 구성되는 MMS(Multi Mode Service)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충정로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열린 공공미디어연구소 창립 3주년 포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망과 종합편성채널 대응'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KBS가 제안한 코리아뷰는 MPEG4 압축 기술로 채널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에 보급된 디지털TV와 호환이 되지 않아 셋톱박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등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외에도 "코리아뷰 같은 경우에는 유료방송에 진출한 KBS드라마, KBS스포츠 등 지상파 계열 PP들이 편입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유료방송을 자극할 수 있다"며 "2007년 MMS 논의가 한창일 때도 언론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방식은 방송 공공성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선욱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사무처장은 "MMS처럼 MPEG2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처럼 MPEG2와 MPEG4가 섞이는 (코리아뷰가) 더 낫다. 시청자들이 더 많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고 반박하며 "호환성 문제는 사업자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채널 서비스 시대로 접어들수록 직접수신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남표 MBC 정책위원은 "설득력 있는 다채널 서비스가 되려면 직접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직접 수신이 얼마인지 면밀히 따져 N스크린 전략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MBC, 지상파 3사 보도 연성화 주도

지난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 MBC · SBS 본부 주최로 열린 '요즘 지상파방송 보도 · 시사프로그램 어때요?'라는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미디어스 김완 기자는 "최근 MBC의 뉴스를 보면 선정적 아이템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보도 연성화 경쟁을 주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때문이냐"고 반문한 뒤 "지금 MBC 뉴스의 프레임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시청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현재 뉴스의 질적인 저하는 시청률이라고 하는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 내부 구성원들에게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재훈 민실위 간사는 "방송3사의 뉴스 연성화를 MBC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실제로 '이 아이템이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아이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보도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심층적 보도를 통해 뉴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화려한 아이템을 많이 배치해 시청률을 높이는 것에 더 많이 매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요즘 MBC의 상황을 보면 2~3년전 KBS를 보고 있는 듯하다. 당시 KBS도 사장이 바뀌자마자 탐사 보도팀이 해체됐고,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담당 기자와 PD들도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말한 뒤 현재 KBS 내부에서는 방송 저널리즘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기자 역시 "KBS의 경우 마땅히 보도해야 할 사안을 뉴스 프레임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에 유리하게 보도하는 부분이 있어 여론의 다양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전사 3DTV 광고, '빈 수레만 요란'

올해 들어 삼성 · LG전자가 각사의 3DTV 수상기 광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청자가 감상할 수 있는 3DTV 콘텐츠는 제한적이어서 '빈 수레만 요란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광고량집계기관인 KADDNMR에 따르면 (미디어오늘 기사 재인용) 올해 1~2월동안 지상파 방송사(지역방송 포함)의 3DTV 광고는 삼성전자가 4억1400만원, LG전자가 10억3700만원이었고 일간지(지역신문 포함) 쪽 광고는 삼성전자 63회, LG전자 85회였다. 그러나 이들의 광고전은 아직 3D 콘텐츠가 부족한 현실을 무시한 채 3DTV 수상기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양상이어서 방송환경과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 위성 · 케이블을 통털어 제공되는 3D 콘텐츠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듀얼스트림(Dual Stream) 실험방송이 유일한데, 듀얼스트림 방식은 아직 기술표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완성의 기술이다. 또한, 양사는 각각 자사의 제품이 'Full HD 3D' 혹은 '상하로도 구현가능한 3D'인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상대방 기술의 단점을 지적하기에만 급급해서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들은 가전사들이 각사의 이익을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에 더욱 골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용 LED 조명기구 개발 국책과제 완료보고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KBS는 오로라라이트뱅크, 서울스테이지라이팅社와 함께 지난 28일 여의도 KBS 본관 공개홀에서 방송용 LED 조명기구개발 국책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김영해 KBS부사장, 김선권 KBS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장, 전현찬 KBS제작리소스센터장, 유수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과 지상파, CATV, IPTV, 위성방송 및 조명 · 영상관계자 등 총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LED Spot & Soft Light 개발 후, HD 카메라 테스트 완료 결과 소비전력 효율이 기존대비 85% 이상 향상됨은 물론, HD화질에 적합한 광원, 기계적 내구성, 색채 표현력이 뛰어난 LED Moving PAR Light의 개발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번 국책과제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정보통신미디어(방송장비)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과제로서, 2009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11년 상반기에 완료됐다.

…… 연합회 동정 ……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기총회 참석 (3.16)
- KOBA 컨퍼런스 준비회의, 4차 (3.22)
- KOBA 데일리뉴스 편집회의, 1차 (3.23)
- 민주언론시민연합 후원회 참석 (3.25)
- 방송용 LED 조명기구 개발 국책과제 완료보고회 개최 (3.28)

…… 회원사 동정 ……

- 부친상, 김성훈 SBS방송기술인협회장 (3.18)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 행 인 | 양창근
편 집 주 간 | 김성훈
편 집 위 원 | 김건희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 재 기 자 | 백선하 강민수
기 획 실 | 강동균
인 쇄 인 | 은행나무
주 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 화 | 02-3219-5635
팩 스 | 02-2647-6813
트 위 터 | @KOBETA_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